

신년 기자회견 모두말씀 및 질문·답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엇그제 신년연설에서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본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돼 온 이전의 국가발전전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지금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신뢰와 통합 같은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합니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되던 것입니다.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해놓고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과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 항공우주 산업의 재무구조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알뜰히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추진위원들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법조교육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지도자가 되면 무엇을 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방식에 관해서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통융합의 문제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국가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빨리 정리해서 우리의 방통융합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훨훨 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도 좋으니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논리만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 FTA, 4대 보험 징수통합, 다 갈등이 많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뤄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 놓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해서 망칠 거라면 몰라도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의 발의도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야당이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신년연설에서 ‘열어 놓고 있다.’ 고 한 것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

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동시성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 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문제의 기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동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데에는 그러한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고 봅니다. 북핵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을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남북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과 북쪽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나쁜 소리도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야당이 들고 나오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고 들고 나왔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옆집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끄집어내서 ‘당신,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세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았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간 시기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해 할 일을 하라. 다만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같은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하지 마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저도 한 때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쥔 것

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 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결정되면 미리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뽐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고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을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는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당의 해체 또는 분열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대통령님 거처와 관련해 탈당설, 우리당 사수설, 적극 개입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 저는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여러 통합론과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과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당 통합을 얘기하고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체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큰 노선으로 크게 묶어서 당을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당을 얘기하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중도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통합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들이 서로를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뤄 가는 통합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 버리면 우리는 민주주의 성공 못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가누가 혼든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당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전당대회를 열어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며 정치를 해 왔습니다.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냅시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제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에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세계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당에 남을 테니까 대통

령이 나가 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해 보자고 멍치면 아주 좋은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상관없이 나간다면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나간다면 그건 제가 당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 중도통합도 할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경쟁 없이 100%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겪어 왔던 동지들 아십니까? 함께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아닙니다.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만든 당이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에서 중도보수까지 포함하는 중도통합으로 가자고 만든 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저 때문에 당이 안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족해서 미우시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 간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을 키우시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지지가 떠나 있고, 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탈당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 제가 개헌을 제안한 것은 2002년 10월이었고 또 당선자 시절에도 꾸준히 발언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 임기 중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국경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05년 4월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 비서실에서 상황보고를 해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헌법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걸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6월에 다시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와서는 개헌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2월 2일에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정기국회 상황이 여러 면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개헌안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고 기다려서 한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아무 동향이 없었고 오히려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개헌은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어떻게든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적이탈, 중립내각 등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무도 반갑다고 하지 않는 중립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립내각,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대연정을 거부했으면 거국내각은 얘기를 안해야지요.

임기단축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안한다면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 여론조사를 볼 때 현재 대선구도로는 여야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야당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원으로서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시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기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필수 자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1997년 대선 때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심각한 권력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될 만큼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권에 대항마가 있긴 했지만 이맘때 한 자리 지지율이던 제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10월 말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상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봐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과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가 너무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을 갖고 도리를 좇아 열심히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무슨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볼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의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 라고 답하는데, 경제정책은 거의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은 경제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를 좀 안다고, 경제학 공부했다고 '경제를 잘 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를 살린 정치인에는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도 있습니다.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와 사회투자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인권과 같은 역사적인 과제는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그 분야에서 논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에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참모로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농치고 그분들도 농친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실력,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농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직장악력이 나오겠지요?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대선에서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개헌안 부결시에 대선주자를 비롯해 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퇴임하시면 경남도민이 되십니다. 고향생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 ●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비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겠지요. 법적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를 고칠 기회를 다 놓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대선과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덮어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씌우려 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도화가 안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어느 후보가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 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대선용이라고 시비 붙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날이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정치판이 돼 버리죠. 개헌의 필요성 대신에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

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 인사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또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보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FTA 관련 협상문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협상타결 목표시한이 3월 말까지인데 주요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측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비서실 진용의 교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가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복귀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문제 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습니다.

문건 유출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건 유출이 적어도 정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조그마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되면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안에서 문건 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떨어지지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것은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 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 단체 편도 아니고 이익을 보는 기업들의 편도 아닙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데 대해 조금 신뢰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위임정치인 본질입니다.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사장의 결정에 맡겨 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간섭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됩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 ●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까? 만약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대통령 ● 제가 대통령입니다.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해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이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경제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 마디 해서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무엇으로 단정하느냐고 물을 것이어서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비는 하겠습니다만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해 근거 없이 보도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안정을 주장했는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안정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관리나 대출규제, 거래세 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미세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블이 서서히 꺼지면서 연착륙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채택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올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과표현실화와 보유세제도가 결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이 되고, 모든 거래 가격도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여기에 따라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제도도 복원됐고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저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역할을 하면 안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장 바깥에 밀려 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동성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정책을 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가면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이 크게 올랐고 1980년대 말에 3저 호황으로 199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올랐지요. 그 뒤 1998년에 푹 떨어졌다가 다시 2002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있던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 달러가 쌓였고 참여정부 와서 600억 달러가 또 쌓였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돈이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정부에서 만든 안이 깎였습니다.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150mg 쓰다가 300mg, 500mg으로 올라갔다 지금 700mg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정책 어떤 부분을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집, 사야지요. '내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힐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야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앞질러서 산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담이 가지 않고 낭패 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0% 정도밖에 안 붙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대책의 틀을 깰 수는 없습니다.

새집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자받아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전체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일일이 선별할 수 없고 모두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면 하나둘씩 통행이 재개됩니다.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볼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장항산업단지라든가 새만금 지원 문제, 혁신도시 갈등, 그리고 수도권 규제 등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힘을 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문제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검토를 토대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사업내용까지 정치적으로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검토가 축적된 토대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갈등 부분은 지역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지역 간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

야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정부혁신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제안해 왔는데,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정부혁신은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바꾸어도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자부심은 있지만 열심히 했다고 특별히 공이 설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 정부가 손해를 볼 일도 없습니다. 정부혁신만큼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와 공직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질 문 ●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등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아베 정권과의 온도차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께서서는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일본을 방문하시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남은 임기 동안 대일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 ●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우리 국민 대부분도 일본 국민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 안에서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지 또는 북한 핵 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한국정부도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납치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전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참배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에 가지는 않았고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서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 비판 없이 바라보고 싶은 심경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지도자들과 여론이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일본만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 를 얘기해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

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랜 고심 끝에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동해' 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 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뜻이 있는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하려면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잘 안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것이 그 말씀의 취지입니다.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